

총선 11개월 앞으로... '정치 1번지' 종로구, 벌써 후끈?

이낙연·임종석·황교안 후보 거론
정세균 현 의원 출마입장은 '아직'

2020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정계의 이른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는 벌써부터 총선 열기로 뜨거운 모양새다. 종로구 현 국회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다만 이 지역구에는 자천타천으로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현재, 종로구가 차기 대선 경연장으로 변화 중이라는 얘기도 하다.

우선 정계에서 서울 종로구 지역이 가진 위상은 상당하다. 역대 종로구를 지역구로 뒀던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증한다. 우선 윤보선(제4대, 종로갑)-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이낙연 국무총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무현(제16대)-이명박(제17대)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그렇다. 그뿐인가. 이민우 전 신민당 전 총재와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 등 정계 거목들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과거 주먹계의 거목인 김두한 전 의원 역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종로(종로을)에서 제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종로가 가진 정계 위상 때문일까. 제21대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일까. 현재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의 '제21대 총선 종로구 출마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얘기는 현역 국회의원 입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상호 의원은 지난달 20일 tbs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제의 관건은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것인가"라면서 "여기에 많이 달린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 황 대표가 나왔을 때 다른 후보가

출마해 이길 수 있다면 (정 전 의장이) 양보할 것이지만 다른 후보가 나와서 도저히 황 대표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서 다른 후보로는 이 총리와 임 전 비서실장이 꼽힌다.

황 대표는 직접 종로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이 필요로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는 게 맞다"고 종로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을 꺼냈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제21대 총선에서의 종로 판세와 관련 "다음 총선까지 11개월이 남았다"라면서 "11개월간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종로가 가진 정계 위상은 상당하다. 지금 거론되는 여권의 이낙연·임종석, 야권의 황교안 등등 여야 잠룡이 거론되는 것은 종로라는 정치적 요새를 다음 총선 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현 지역구 의원인 정 전 의장은 '출마 또는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관례적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안팎에서는 '정 전 의장이 정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이 다음 총선에서도 종로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도. 이러한 진단 역시 제21대 총선에서의 종로 선거판을 키우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종로의 역대 판세를 살펴보면 여야의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로는 지난 12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현 야권인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지역구에 깃발을 꽂았다. 다만 최근 치러진 제19대와 제20대 총선에서는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지역구에 깃발을 꽂았다. 여야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구에서의 승리를 쉽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與 “상속규제 완화”... 공제대상 확대 주목

기업상속 기초 바꾼 민주당

중소·중견 사후관리기간 10→7년
상속공제 대상 '확대vs유지' 이견

'기업 상속' 관련 규제 완화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를 바꾸는 모양새다. 당정(여당·정부)이 '기업상속공제'를 얼마나 확대할지 주목된다.

◆여당, '공제 대상' 두고 정부와 이견... 친기업 노선 타나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이달 발표할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기업상속공제 확대 규모다. 현행 '기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대신 상속인(상속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휴·폐업 금지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지분 100% 유지 ▲고용 100% 유지 등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조건을 1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 상속세·이자상당액 등을 부과해야 한다.

당정은 지난달 말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안에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편안에는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상을 5000억원 또는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제서야 '규제 완화' 이유는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상속공제 확대법이 안건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올랐다.

자유한국당의 전신(前身)으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영 의원(현 바른미래당)이 "이 제도로 276개 기업이 장래에 6조원 상당의 상속세를 안 내게 된다"고 강력 반대를 외쳤고, 해당 법안은 표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 본회의 상정 법안이 반대토론으로 부결한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인데 김 의원도 당시 "예상 못한 결과"라고 하기도 했다.

반대를 고수했던 민주당은 집권당에 앉은 후 기업상속공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불경기 여파와 경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기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현행 상속세율(최고 50%)이 너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게 경영계 지적이다.

◆'해택 축소' vs '대상 확대'... 당 내부 진통은 아직

20대 국회 의안분석 결과, 여야가 올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중 3건은 민주당, 나머지 10건은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국당에선 올해 정갑윤·이현재·추경호·최교일·김규환·박명재·이종구·이진복·송언석 의원 등 9명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냈다. 한국당은 중소기업도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면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전히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이 3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논쟁은 여전하다. 여권에서는 유승희·이원욱·윤후덕 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상속 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미만'까지 늘렸다.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하지만 공제 규모는 1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입법을 통해 "기업상속제 완화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업상속제가 불평등·양극화 현상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與野, 6월국회 협상 돌입... 법안처리 미지수

3당 원내대표 정국해법 논의
추경예산·최저임금 등 이견

임시국회 장기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6월 국회 정상화를 두고 물밑 협상에 나섰다. 다만 임시회 물꼬가 트여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해 정국해법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단독 강행'까지 예고했지만, 한국당은 '투쟁'을 강조하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국회가 6월 임시회에 나서도 한국당 등 야권이 얼마나 협조할진 미지수다.

당장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부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에 대해선 민주당 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에서도 이른바 내년 21대 총선용 현금살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노동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사회 전반적 부분에서 여야 이견은 여전하다. 최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강행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에 대해서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에서 각각 새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오신환 의원과 유성엽 의원은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패스트 트랙 안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석대성 기자

노동부, 4차혁명 선도인력 양성기관 공모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9년 하반기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할 대학 또는 민간 선도 훈련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시작한 이 사업에는 서울대, 수원대, 멀티 캠퍼스 등이 참여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스마트 제조 등 8대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2017년~2018년에는 연간 900명 내외의 고학력 실업자 등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600명, 하반기 700명 등 총 1300명으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훈련에는 관련 분야 전공자뿐만 아니

라 비전공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70%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모집자를 기준으로 비전공자 47.6%가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 공모에는 기존 8개 훈련 분야 외에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분야인 클라우드 등으로 훈련 분야를 넓힐 계획이다.

훈련 수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5수준 이상의 고급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신산업 분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지 않은 분야는 훈련 수준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면 훈련 과정으로 허용한다. /한용수 기자 hys@